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영 인 부

목 차

1. 대북정책 목표

『평화·화해·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2. 대북정책 3대 원칙

-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 흡수통일 배제
-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3. 대북정책 추진기조

- 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
-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 남북간 상호이익 도모
- 남북당사자 해결원칙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

4. 대북정책 추진방향

- 남북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
-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우선 해결
- 북한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의 탄력적 제공
-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

1. 대북정책 목표

『평화·화해·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국민의 정부」는 「평화·화해·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당장 통일을 이룩하는 데 주력하기보다 평화 정착을 통해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실현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평화정착의 기반 위에서 남북간에 화해를 도모하고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 대북정책 3대 원칙

①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의 첫번째 원칙은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억제를 위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상응한 대응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무력에 의존하는 대남전략·전술을 포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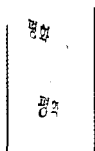
이와 함께 한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감으로써 무력도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② 흡수통일 배제

두번째 원칙으로 「국민의 정부」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기보다는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통해 「남북연합」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남북연합」을 단계적으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평화통일을 달성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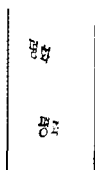


③ 화해 · 협력의 적극 추진

세번째 원칙은 평화정착의 기반위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입니다.

분단이후 누적되어 온 남북간의 적대감정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능한 분야부터 대북 화해 · 협력을 추진해 나가면서 중단된 「남북기본 합의서」 체제를 복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북한이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남북간에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 전체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하고 이제부터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공존의 토대 위에서 남북간의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통일지향적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룩할 것입니다.

화해 · 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북한체제 붕괴론에 근거한 대북 압박정책보다는 북한의 대남정책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의 현실적 대안일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강요하기보다는 북한 스스로가 변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지고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선동 · 위협 · 억지 등 비합리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의연히 대처하되 보다 많은 접촉 · 보다 많은 대화 · 보다 많은 협력을 추진하여 북한이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남북간 상호이익 도모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나 시혜의 차원을 벗어나 민족 전체의 공동발전과 번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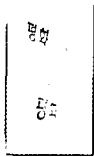
이제 남북한은 상호 보완성에 기초하여 경제공동체의 통일적 발전을 추구할 때입니다.

남북당사자 해결원칙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우리 민족의 장래를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반도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정부」는 남북간 문제를 남북당사자가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꾸준히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진행중인 4자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긴장완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

국민적 합의와 지지는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토대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소수 특정인이 밀실에서 대북정책을 결정하거나 정부의 공식기구가 아닌 비선조직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일관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합의를 얻어낼 것입니다.

4. 대북정책 추진방향

남북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

남북한 당국이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대해 완전히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민족의 장전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를 착실히 이행·준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국민의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관한 남북 최고당국자의 의사와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특사교환을 비롯하여 각종 남북 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남북간에 우선적으로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 협의·실행하고 점차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면 이행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남북경협은 경제논리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경협은 우선 북한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분야부터 추진할 수도 있지만, 상호 이익이 되고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사안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이를 위해 기업인 방북 확대, 투자규모 상향 조정, 경협절차 간소화 등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우선 해결

분단 반세기가 넘었지만 1천만 이산가족들은 아직도 흩어진 가족들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1세대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국민의 정부」는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령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방북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것이며 영세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제3국 및 국제협력활동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도 지원할 것입니다.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면회소», 「우편물교환소」 설치 및 「고향방문단」 교환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의 탄력적 제공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정부차원의 직접 지원은 남북당국간 대화를 통해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남북 농업개발 협력 및 경험 활성화 등을 통해 북한식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노력도 지원할 것입니다.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경수로 건설은 북한 핵동결의 대가로 지원하는 사업인 동시에 중·장기적 차원의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은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지만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성실히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일간 재원분담협상을 원만히 타결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국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

한반도 문제는 남북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입니다. 경수로 건설, 4자회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등을 통해 이미 주변국 및 국제사회가 한반도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남북대화를 중심으로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할 것입니다.

동시에 4자회담 등을 활용,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노력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 주변국이 참여하는 「지역안보협력체」 구성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과의 조화속에 북한이 미·일은 물론 국제기구와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